



주간통일정세 2014-07(2014.02.10~02.1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4-0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이달말 黨 사상일꾼대회…10년만에 열려(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2004년 2월 이후 10년만에 "조선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가 2월 하순 에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데서 당 사상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일대 정치 사상 공세로 천만군민을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 총괄기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농업 분조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2/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촬영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에게 "농업부 문 분조장들에 대한 당의 믿음은 매우 크다"며 "모든 분조장들이 자기들 의 임무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 농업 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 게 일으켜나가는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 **北, '백두혈통' 이상화 장소 '혁명전적지' 부각(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1면 사설에서 "우리는 사상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격동 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백전백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당 조직들에서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 관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답 사와 참관 과정에 우등불(모닥불) 모임과 웅변 모임, 결의 모임 같은 것 도 잘 조직해야 한다"고 덧붙임.

- **北 김정은, 사격경기용 총탄공장 시찰(2/12,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경기용 총 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함.
 - 총탄공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멋쟁이 공장'이라며 만족감을 표시 하고 이번 리모델링으로 "경기용 총탄 생산을 늘리고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함.

● 사상교육 총공세 나선 北 "언론이 사상전 앞장서야"(2/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출판보도부문이 앞장에 서서 사상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사상은 무기 없이 세계를 지배한다"며 "오늘의 사상전·선전선동전은 신문·통신·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부문이 기수가 돼 주도해나가야 할 언론 총공세"라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신문은 당면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내세우고, 언론인들이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로지 김 제1위원장의 '참된 동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함.

● 北, '제2의 백두산' 마두산 띄우기...3대세습 정당화(2/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11일에 이어 13일 마두산 지역에서 '마두산을 백두산으로!' 등의 글이 새겨진 '구호나무'가 대거 발굴됐다고 보도함.
- 신문은 마두산에서 발굴된 51점의 구호나무에서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숙·김정일)을 찬양하고 '혁명신념', '일편단심' 등 영도자에 대한 변심없는 충성을 강조한 구호들을 소개했으며 김 주석의 빨치산 소부대가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마두산에 '비밀근거지'를 만들고 은신하며 나무들에 이런 구호를 써넣었다고 주장함.

● 北, 정월대보름 '분위기' 부각...우상화 선전도(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내 조국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수님(김정은)의 품에서 우리 인민은 매일, 매 시각 아름다운 삶을 누리간다"며 북한 주민들이 대보름 달빛을 보며 "원수님 품을 떠나 우린 못살아"라고 목청껏 외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정월대보름과 관련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화를 소개하며 "정월대보름은 장군님(김정일)의 숭고한 민족애에 받들려 다시 태어났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시대 '첫 선거' 준비에 총력(2/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북한에서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화됐다고 하며 "선거구, 선거분구 위원회들은 선거사업과 관련한 일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2월 초 현재 전국 각지에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선거분구들이 일제히 조직돼 자기 활동을 개시했다"며 현재 평양시내의 모든 선거구와 선거분구에 선거위원회 간판이 나붙었다고 밝힘.
- 신문은 또 "선거위원회들에서 현재 선거자 명부 작성사업에 진입했다"며 특히 "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이번 선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



장을 잘 꾸리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함.

- 이어 평양시 선거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 시대의 첫 선거를 맞이하는 시민들은 김정은 원수님을 자기 선거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높이 모실 것을 열망하는 편지들을 보내오고 있다"며 주민들의 충성심을 부각함.

● 北신문, "백두혈통은 이어질것"...대이은 충성 강조(2/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하루 앞둔 15일 '백두혈통'을 강조하며 대를 이어 최고지도자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함.
-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른다' 제목의 정론에서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92년 아들 김 위원장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지은 '광명성 찬가'를 소개하며 여기에는 "소백수처럼 백두의 혈통은 굳건히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조선(북한)은 수령복과 함께 후계자복을 타고난 나라"라며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이라고 거듭 주장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의 기상과 배짱, 의지가 백두산을 닮았으며 "백두산 가문의 천품을 그대로 지니신 또 한 분의 희세의 위인을 모시여 주체 혁명 위업은 승리의 궤도를 따라 변함없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찬양함.
- 신문은 "수령복, 장군복, 후계자복을 대를 이어 누리는 크나큰 행운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며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받들어갈 천만 국민의 신념의 맹세가 하늘땅을 뒤흔다"라고 주장함.

● 北, 김정일 생일 중앙보고대회...김정은에 충성 강조(2/15,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15일 오후 평양체육관에서 당·정·군 주요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김정일 동지 탄생 7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실황 중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 제1위원장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며 "(그의) 영도에 의해 전례 없는 건설의 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칭송함.
- 김 상임위원장은 '백두혈통' 계승을 강조하면서 전체 당원과 군 장병에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동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전당, 전군, 전민이 당 중앙의 두리에 단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함.
- 그는 "올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확대 발전 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임.

- 15일 대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최태복·김기남 당 비서, 박봉주 내각 총리, 박도춘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영일·김평해·곽범기 당 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무영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등이 참석함.

● 北 김정은, 김정일 생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6일 0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2 번째 생일을 맞아 군 지휘부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참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렴철성 군 총정치국 부국장 등이 참가함.
- 통신은 "참가자들은 장군님(김정일)의 간곡한 유훈을 순간도 잊지 않고 영원히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의 영도만을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총대전우로 살며 투쟁할 불타는 맹세를 다졌다"고 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과 정부의 고위간부, 근로단체 및 중앙기관 간부들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과 별도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함.
- 북한은 또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김락겸 전략로켓군사령관을 상장(우리의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군 장성급 3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은동향

- 2/10,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2.1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기남, 최태복, 김평해, 곽범기, 조연준, 리재일, 리철만 등 참가
- 2/12,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개건된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 시찰(2.12, 중앙방송·평양방송)
- 최부일(인민보안부장)과 마원춘(黨 부부장) 동행
- 2/13,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순녀(해주시 사회급양관리소 노동자) 등 '당과 수령에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인민보안원들에게 '감사' 전달(2.13, 노동신문)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의 날(3.9 예정) 즈음 '비밀투표 방법에 따라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 된다'며 '모든 17세 이상 국민은 선거에 참가할 수 있고 대의원으로 선거 받을 수 있다'고 '北 선거제도'를 선전(2.10, 중앙통신)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5월1일경기장 개건보수 정형을 현지에서 요해(2.12,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경제

- 北, 학생·과학자 이어 농민도 "딴 일에 동원말라"(2/11, 연합뉴스)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일 '전국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는 농민이 농사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서한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농촌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협동농장들의 노력과 영농설비들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밝힘.

- 기타 (대내 경제)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3,584호(2.11 발표), 순안면옥 등 11개 단위에 '2중3대혁명붉은기'·평양곡산공장 가공직장 등 33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2.14, 중앙방송)

다. 군사

- 北, 노동적위군 지휘관 열성자회의 개최(2/1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11일 우리의 민방위부대 격인 노동적위군 지휘관 열성자회의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함.
 - 방송은 "이번 회의는 노동적위군 안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혁명적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민방위무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함.



- **북한, 작년 성탄절에 탄도 미사일 엔진 실험(2/13, NHK)**
 -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고 나서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엔진 연소 실험을 했다고 NHK가 13일 보도함.
 - 방송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 12월2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한 것이 확인됐으며 대상이 된 엔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용으로 보이며 연소 실험은 이번을 포함해 6번째라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독감 예방에 총력...검역 강화(2/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세계적으로 A(H1N1)형의 돌림감기(유행성 감기)가 급속히 전파되어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선에서 돌림감기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 통신은 이어 "외부로부터 돌림감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비행장과 항만, 국경역들에서 여행자들과 화물들에 대한 검역이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北 '국제피겨축전' 열어(2/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조선에서 제23차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경축 백두산상 국제휘거(피겨)축전 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라며 축전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고 밝힘.
 - 통신은 특히 축전준비위원회 관계자 리철운을 인용해 올해 피겨축전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선수들이 축전 참가를 요청해왔다"고 전함.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명절' 분위기 고조(2/13,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명성절을 맞아 강원도의 고아양육시설인 원산육아원에 노루고기와 꿩고기를 선물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함.
 - 방송은 육아원 원장과 직원이 김 제1위원장의 "후대(後代)사랑, 미래사랑"을 칭송하며 "원아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키워 꼭 나라의 훌륭한 기동감들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北, 노동신문사 사장 1년 만에 리영식으로 교체(2/13, 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신문사 사장을 1년 만에 리영식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



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신은 노동신문이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설혁명' 제시(1974년 2월 12일) 40주년 기념보고회 기사에서 리영식을 노동신문사 책임주필로 소개했다며 사장과 책임주필을 겸하는 노동신문사의 특성상 사장이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北 신문 '세계교육사례' 연재...교육도 '국제화'인가(2/16, 연합뉴스; 교육신문)

- 연합뉴스가 16일 입수한 북한 주간 교육신문 2월 6일자는 3면 '세계교육교양참고자료' 코너에 '큰 포부를 심어주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함.
- 이 글은 '어느 한 나라의 중학교에서 새 학기마다 '학생대회'를 열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모범 교사를 표창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교사를 고무하는 "아주 이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 신문은 1월 30일자부터 세계교육교양참고자료 코너를 만들어 관련 글을 실기 시작하였으며, 30일자의 글은 "많은 나라들에서 굳어진 교육 관념을 대담하게 갱신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기성 관념'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함.
- 교육신문은 향후 이 코너를 통해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탐구,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 형태와 방법들"을 소개해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2월 7일 9시부터 10일 14시 사이에 강원도 고성군 155cm, 안변군 104cm, 통천군 92cm, 원산시 73cm, 함경남도 고원군 47cm 등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고 보도(2.10, 중앙통신)
- 제19차 백두산상 중앙기관 일꾼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2.11 평양체육관에서 로두철(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 위원장)·리영수(黨 부장)·현상주(직업총동맹 위원장)·리종무(체육상)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여자축구팀, 2.11 '2014년 중국 영천국제여자축구초청경기(北·中·뉴질랜드·멕시코)'에서 對멕시코팀에 2:0 승리(2.11, 중앙통신)
- 北, 2013년 최우수 남녀 유도선수로 '홍국현과 설경'을 선정(2.12, 중앙통신)
- 北, 'H7N9형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전파 방지를 위해 '새·가금류 수입금지'와 열차·짐배들에 대한 검역·방역 강화 및 주민들을 대상 위생선전과·예방대책 홍보' 등 "방역사업"에 주력(2.13, 중앙통신)
- 北 여자축구팀, 2.13 '2014년 중국 영천국제여자축구초청경기(北·中·뉴질랜드·멕시코)' 對뉴질랜드팀에 1:0 승리(2.13, 중앙통신)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日 플루토늄 보유는 핵무장 책동"(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우려 단계를 넘어선 일본의 핵 무장화 책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저축하고 있다"고 임의의 시각에 핵 무장화를 실현하지는 것"이라고 지적함.
 - 신문은 일본 당국자들이 플루토늄 보유는 과학연구와 원자로 가동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순수 과학연구와 평화적 핵 활동을 위해서라면 동력 수요를 엄청나게 초과하는 그렇게 많은 양의 플루토늄이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말함.
 - 또한 "핵 무장화는 일본의 변함없는 야심이며 군사대국화의 전략적 목표"라며 "집요한 핵 무장화 책동으로 오늘 일본은 핵무기를 제작·보유·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고 이제 남은 것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비난함.

- **北 김영남, 소치 방문 마치고 귀국(2/10, 조선중앙TV)**
 -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통신은 김 상임위원장은 개막식이 열린 지난 7일 소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났다고 보도함.

- **IOC, 소치올림픽 앞두고 北선수 6만弗 지원(2/11,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 선수들에게 약 6만 달러(약 6천400만 원)를 지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IOC 산하 올림픽연대위원회는 북한 남자 피겨 선수 최현을 비롯한 3명이 소치 올림픽 출전권을 딸 수 있도록 2012년 11월부터 1인당 매월 1천500 달러(약 160만 원)를 훈련비로 지급했으나 이들 선수 모두 소치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실패하자 올림픽연대위원회는 훈련비 지급을 중단함.

- **캐나다, 지난해 탈북자 난민 수용률 8%에 불과(2/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가 지난해 탈북자 난민 신청 257건을 심사해 이들 중 8%에 해당하는 2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캐나다 이민난민국 멜리사 앤더슨 선임공보담당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지난해 수치는 캐나다 정부가 2012년 290명의 탈북자 출신 난민 신청자 중 230명(79.3%)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임.

● **北 "美,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도발자"(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핵위협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최근 미국 당국자들이 잇따라 북한의 '핵위협'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자,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전인류를 몇 번이고 멸살시킬 수 있는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방대한 핵 타격 수단들을 전개해 놓고 있는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해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함.

● **北 "일제 강제연행 범죄 반드시 계산될 것"(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된 조선인 청장년은 무려 840만여 명에 달했고 100여만 명이 학살됐다고 "일본이 아무리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 해도 역사와 인류의 기억 속에서 일본의 과거범죄를 지워버릴 수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일본의 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의 강제연행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계속 군국화, 우경화의 길로 나간다면 "일본은 영원히 국제사회의 적국으로 배격당할 것"이라고 주장함.

● **유엔, 오는 5월 北 인권상황 정례검토(2/11, 미국의소리(VOA))**

-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오는 5월 1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실시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북한은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UNHRC의 제19차 UPR 대상국에 포함돼 5월 1일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각 회원국은 북한 당국이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 기록, 비정부기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사하고 UNHRC는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결과문을 5월 6일 채택할 예정임.

● **北 "美 핵폭탄 밑 어떻게 마음편히 혈육의 정 나누나"(2/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아닌 미국 이라면서 최근 서해 상공에서 이뤄진 미 B-52 전략폭격기 훈련을 거듭 비난함.
- 통신은 지난 5일 미 B-52 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 상공에서 훈련한 사



실을 거론하며 "상봉 행사 참가자들 대다수가 (6·25전쟁 때) 미국의 원자탄 공격에 의해 생이별당한 사람들일진대 언제 떨어질지 모를 미국의 핵폭탄 밑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으며 조선반도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안정으로 지향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함.

- **그레그 전 美대사, 北서 다양한 현안 논의(2/12, 미국의소리(VOA))**
 - 북한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지난 10일 태평양세기연구소 대표단 4명과 함께 방북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 당국과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그레그 전 대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미국 비정부기구 '태평양세기연구소'(Pacific Century Institute)의 대변인격인 토마스 플레이트 로올라 매리마운트대학 교수는 지난 5일 VOA에 그레그 전 대사 일행이 북한 당국과 어떤 주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플레이트 교수는 그레그 전 대사 일행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석방 문제를 논의할지를 묻는 말에 서로 대화가 이뤄지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어떤 사안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유엔 北인권조사위, 17일 최종보고서 발표(2/1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이달 17일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COI는 마이클 커피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 내용과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증거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며 보고서는 다음 달 17일 유엔 인권이사회(HRC)에 공식 제출됨.
- **北청천강호, 선원 32명 태우고 쿠바행(2/13, AFP통신)**
 - AFP통신은 억류된 북한 선원들의 변호인 측은 이르면 13일(현지시간) 청천강호가 선원 32명을 태우고 쿠바로 향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파나마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원 32명은 이민청에서 수속을 끝내고 파나마 근해에 정박 중인 청천강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과 일등항해사, 정치 임무를 띤 요원 등 3명은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 검찰의 재판을 받아야 함.
- **北, 러시아 극동에 관광사무소 설치 추진(2/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관광객 유치를 겨냥해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州)에 관광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WFP "지난해 北 주민 식량소비 상태 개선"(2/14, 연합뉴스)**
 - 14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웹사이트에 발표한 대북 지원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북한 가구의 46%가 식량 소비 면에서 '적당'(acceptable)으로 분류돼 북한 주민의 식량 소비상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WFP에 따르면 '취약'(poor)에 해당하는 가구는 17%였으며 '경계'(borderline)에 속하는 가구는 38%였지만 이는 1년 전인 2012년 4분기 상황에 '적당', '취약', '경계'가 각각 26%, 24%, 50%인 상황에 비해 개선된 것임.
 -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소비 상태가 나아진 것은 식량 배급량이 증가한데다 WFP의 지원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WFP는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배급량이 작년 10월 390g으로 늘어난 데 이어 11~12월에는 400g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함.

- **유엔 위원단, 북한-아프리카 국가 군사거래 조사중(2/14, 아사히신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전문가 패널(위원단)이 북한과 동아프리카 국가 간의 군사 거래를 조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함.
 -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는 위원단이 에티오피아의 탄약 제조회사와 북한 측 단체가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2011년 5월 북한에서 홍해 연안국 에리트레아로 운송된 공작 기계가 양국의 무기 협력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제기돼 에리트레아에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힘.

- **北, '국방위 성명'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2/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성명 '남조선 당국은 온 민족 앞에 자기의 속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가 1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4/84호로 배포됐다"고 보도함.



■ 기타 (대외 일반)

- 美 태평양세기연구소 회장 '도널드 그레그'(前 주한 미국대사)와 일행, 2월 10일 평양에 도착(2.10, 중앙통신)
- 北 외무성(김형준 외무성 부상), 2.11 '2014년 새해' 즈음 '중국 대사관 성원들('류홍재' 주북 중국 대사 등)과 친선모임' 개최(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박의춘(외무상), 2.11 이란 혁명승리 35주년 관련 同國 대통령·외무상에게 각각 축전(2.11, 중앙통신·평양방송)
- 주북 러시아 대사, 2.11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박의춘(외무상)·공석웅(외무성 부상)·서호원(北-러 친선협회 위원장·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초대한 가운데 "러시아 외교일꾼절" 기념 연회 개최(2.11, 중앙통신)
- 駐北 이란 대사관, 2월 12일 '이란 혁명승리' 35돌 즈음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개최(2.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근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관과 도덕적 저열성이 강하게 문제시 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청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며 "과거청산의 용단"을 촉구(2.12, 중앙통신·민주조선)
- 일본에서 "과거침략 역사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야스쿠니 신사' 참배·자위대무력 증강과 해외팽창 등)이 커가고 있다"며 이는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종(2.13,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연일 남북관계 개선 언급하며 南 변화 촉구(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북남관계 개선은 시대의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제안한 국방위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거론하며 남한이 미국 등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호소에 적극 화답해 나설 때 북남관계에 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남북고위급접촉 개최' 신속 보도(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고위급 접촉이 시작된 지 1시간20분 만인 12일 오전 11



시24분께 "북남 고위급접촉이 12일 판문점에서 진행된다"라고 신속히 보도함.

- 통신은 "여기에는 우리 측에서 원동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여 북남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함.

● **고위급 접촉 제안한 北, 연일 평화공세(2/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 12일 '평화수호는 우리 공화국의 확고 부동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며 의지"라고 강조함.
- 신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평화수호 의지를 시험해보려 하지 말아야 하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공격적인 표현은 자제함.

● **北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은 국방위 대표단"(2/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오후 5시 4분께 "접촉에서 쌍방은 북남 관계를 개선해 민족적 단합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 의지를 확인하고 북과 남 사이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했으며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진행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단 ▲상호 관심사 계속 협의 및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 등 3개항으로 된 '공동보도문' 전문을 공개함.
- 통신은 "접촉에는 우리 측에서 원동연 노동당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위원회 대표단이 참가했다"고 언급, 이번 고위급 접촉에 나선 북한 대표단이 '국방위원회 대표단'이라고 처음으로 밝힘.

● **北, 남북관계 개선 강조...대남비난은 자제(2/1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북남관계 개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이루느냐 아니면 체제대결의 악순환 속에 전쟁의 참화를 들쓰느냐 하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있다"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은 북과 남 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상태를 해소하고 호상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 성패에 따라 "북남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함.

● **北, "남북공조가 북미 핵협상 촉진할 수 있어"(2/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최고수뇌부의 결심 / 분열사에 중지부름(3)'이라는 글



- 에서 남북 간 핵재난 예방 조치 등을 제안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에는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며 "북남의 공조가 조미(북미) 간의 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의 핵타격 수단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을 결단이 그를 위한 단서를 마련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동족대결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선순환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임.

● 조선신보 "고위급 접촉, 北최고수뇌부 결심 구현"(2/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추진 등에 합의한 전날 고위급 접촉에 대해 "북한 최고수뇌부의 결심이 북남대화의 장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라고 평가함.
- 조선신보는 '판문점 합의,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첫 결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고위급 접촉 결과는 "북의 최고수뇌부가 통일에 관한 결심을 이미 정책화해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이어 "1990년대 이후 '고위급'이라고 불린 회담이 여러 번 있었으나 이번 접촉은 양상을 달리한다"라며 "전례 없는 대면방식"이라고 강조함. 조선신보는 "각기 수뇌의 뜻을 직접 전달하고 그 반응을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직위, 직책의 인물들이 대화를 위해 판문점에서 만났다"며 "북남 수뇌들의 뜻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창구가 정상가동한다면 북남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돼 나갈 수 있다"라고 전망함.

■ 기타 (대남)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北)의 동포애적 선의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南 당국도 곡해와 대결관념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2.10,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거론 '평화수호 의지를 시험해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韓·美 당국에게 훈련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분위기' 지속 주장(2.12,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을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 위험을 조성하는 주범'이라며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등 각계층의 KR·FE 연습반대 투쟁 전개'를 지속 주장(2.13, 평양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인터뷰> 메데이로스 "대북정책 불변...압박과 제재가 핵심">(2/9, 연합뉴스)

-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현 대북정책 기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특히 압박과 제재가 외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 이어 "북한은 핵 협상을 시작하는 근본 토대인 비핵화 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 메데이로스 선임보좌관은 북핵 해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은 북한의 도전을 대처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동반자이며, 중국이 최근 북한이 비핵화 길로 되돌아오도록 압박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또한 미국은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매우 책임감있고 신중한 결정들로 이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작년 성탄절에 탄도 미사일 엔진 실험>(NHK)>(2/13, 연합뉴스)

- NHK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 12월2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이어 대상이 된 엔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용으로 보이며, 연소 실험은 이번을 포함해 6번째라고 전했다.
-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대의 높이를 37m에서 52m로 올려 미국 동부 해안도 사거리에 포함되며 더 멀리 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NHK는 장성택 처형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北 풍계리 핵실험장 굴착작업 가속도>(38노스)>(2/14,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1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최근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의 굴착 작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



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처음 등장한 서쪽의 새 갱도 인근에서 굴착 작업에 따른 토사 더미가 계속 포착됐으며, 특히 최근 1개월여만에 토사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지도부의 결정만 있으면 1~2개월 내에 핵실험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성사진에는 핵실험이 준비되고 있는 징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음.
- 이밖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힌데 대해 "그 진단은 정확한 것 같다"고 평가했음.

나. 미·북 관계

● <백악관 "킹특사 방북 무산 실망...석방 노력 지속">(2/11,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케네스 배씨의 석방을 위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초청을 취소한 데 실망감을 나타냈음.
-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정기적이며 방어 목적의 훈련으로 배씨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북한이 배씨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던 점도 상기시켰음.
- 이어 제이 카니 대변인은 "배씨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그 노력의 하나로 킹 특사를 북한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배씨 가족은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의 방북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쟈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러한 노력에 대해 지지할 바 있음.

● <방북 그레그 前대사 귀환... "케네스 배 석방 촉구">(2/14, 연합뉴스)

- 최근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미국 NGO인 태평양세기연구소 대표단 자격으로 방북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14일 베이징으로 귀환, 방북기간 북한 당국에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혔음.
- 그레그 전 대사는 "케네스 배 씨 석방문제가 우리가 북한에 간 이유는 아니었다"면서도 "북한 측에 유감과 함께 조속히 석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음.
- 그는 이번 방북 소감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웠고 우리 대화는 친근했다"며 "북한인사들과 세 차례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
- 미국 ABC 뉴스는 같은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리영호 북한 외무성 제1 부부장 등 북한 관리들의 말을 빌려 배 씨가 노동교화소에 재수감된 것은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격에 화가 치민 북한 당국의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시진핑-김영남 회동에 '침묵'...배경 주목>>(2/9, 연합뉴스)
 -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 소치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다는 소식을 전혀 밝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시 주석의 소치 방문 일정 및 결과를 상세히 전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음.
 - 반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시 주석과 김 상임위원장과 면담 내용을 상세하게 전한 바 시 주석과 김 상임위원장이 소치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회동했을 것으로 보임.
 - 베이징 외교부에서는 공식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만약 중국측이 의도적으로 회동 사실을 미공개한 것이라면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처형 등으로 다소 꺾여진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중국, 김정은 집권 직후 北에 6억위안 무상원조>>(2/11, 연합뉴스)
 - 중국 시사잡지 '연황춘추'에 따르면 원로학자인 허팡 중국 사회과학원 영예학부위원은 최근 기고한 논문에서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인 2012년 2월 말 이후 6억위안(약 1천60억원) 상당의 무상원조를 했다는 주장을 폈음.
 - 중국학자가 직접 원조 규모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며, 허 위원은 "이는 중국의 북한 원조 역사에서 한번에 제공한 무상원조 규모로는 최대"라고 밝혔음.
 - 허 위원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북한은 형식적인 사전 통보만을 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통보한 것이 미국보다 뒤인 적도 있었다"고 지적한 바, 이는 최근 일련의 도발 과정에서 북한이 중국보다 미국에 먼저 통보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그는 이 논문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지원은 근본적인 오류"였다면서 "북한은 중국의 끊임없는 지원에도 민생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中한반도담당 실무진 방북...6자회담 문제 논의한듯>>(2/12,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주시(司·국) 책임자가 북한을 다녀왔다"고 확인하며 "중북은 이웃국가로, 양국의 외교부문은 계속 밀접하게 왕래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주시는 주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업무를 봤고, 방북 기간에 북한 외무성 및 관계기관 책임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들에 따르면 6자회담을 전담하는 한반도판공실 직원들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한반도 실무 대표단이 방북한 것은 장성택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임.

- 베이징 외교가는 이번 방북이 북한이 이산가족상봉에 합의하고 남측에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안하는 등 유화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있음.
- 이에 대해 14일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중국 한반도 당 실무자들의 북한 방문은 양측간 전통적인 우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했음.

라. 일·북 관계

● <“日아베 자문역, 작년 10월 비밀 訪中…北 접촉한듯”>(2/11,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이치마 이사오내각관방 참여(총리 자문역)가 지난해 10월 비밀리에 중국 다롄을 방문, 북한 당국자와 접촉해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만약 접촉이 사실이라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본부 건물 경매 문제나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문제를 의제로 올렸을 것이 확실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음.
- 한편, 지난달 26~27일에는 일본 당국자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측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있고 북한과 일본 모두 고립·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치마 참여의 북한 접촉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 공조 체제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임.

마. 기타

● <“北 한미군사훈련에 도발하면 美日 제재 강화”>(2/13,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24일 시작되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시도하면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미일간의 의견 일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이달 7일 미국을 방문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이뤄졌다고 함.
- 신문은 미국과 일본은 자산동결 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것 등을 제재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갈 때 보유할 수 있는 현금 한도액(현행 10만 엔)이나 북한 송금 시 보고 의무 기준액(300만 엔)을 더 낮추는 방안을 독자 제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오바마,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안 정식 서명>(2/13, 연합뉴스)
 -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한·미 양국간 기존 원자력 협력 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S.190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지난달말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한 이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서명함에 따라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음.
 -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여왔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오바마, 4월 아시아 순방때 한국 방문...'1박2일' 유력>(2/13, 연합뉴스)
 -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 경제, 안보적 관여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다고 발표했다.
 - 백악관은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4월 22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23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이번 순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한·일이 팽팽한 '과거사 외교전'을 펴는 현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만 방문할 경우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한미, '남북 접촉' 후속협의를...대북정책 재확인>>(2/14,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13일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전날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 및 14일 후속 접촉 전망 등을 논의하며 북한의 최근 대화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음.
 - 양국은 북한이 대화 공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런 차원에서 양국은 북한에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키로 했으며,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접근을 강화키로 했음.
 - 이날 양국 장관회담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으며, 케리 장관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통일 대박론을 환영했음.
 - 한편, 케리 장관은 13일 열린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는 제쳐놓고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돕겠다고 밝혀 이번 방한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재차 주문했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위안부' 문헌자료 세계유산 등재 공동 신청>(2/14, 인민망)
 - 한·중 학자들은 상하이 사범대학에서 2월 8일과 9일 열린 일본군 중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일본군 중군위안부 관련 문헌과 조사 자료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음.
 -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상하이 사범대학의 쑤즈량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본 가고시마현 미나미큐슈시가 가미카제 특공대원의 유서 등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항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음.
 - 공동선언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외에도 한·중 간에 위안부 문서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위안부 문제 연구를 위한 전문 웹사이트도 개설한다고 밝혔음.

다. 한일 관계

- <국방부 "日 집단자위권 지역불안정 초래해선 안돼">(2/11, 연합뉴스)
 - 국방부는 11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음.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단자위권에 대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음.
 - 김 대변인은 "자위권에 대한 권한은 그 나라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일본은 주변국을 이해시키지 않고 계속 퇴행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해소해야만 집단자위권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차원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 <정부 "일북 협의, 한미일 협의하에 해야">(2/11,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 등 일북간 협력이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미일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 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역이 지난해 북한 당국자와 접촉해 현안을 논의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외교부도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일본의 이런 독자적 움직임이 사실일 경우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각



공조가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정부는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 공들이고 있음.

- <‘역지 10단’ 아베 “軍위안부 문제제기는 비방증상”>(2/12,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을 “비방증상”에 비유하며 냉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아베 총리는 나카야마 나리아키 의원이 “일본의 관헌이 강제로 조선의 여성을 강제연행해서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위안부는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한국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추모 기념일’ 제정 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음.
 -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 정치문제화해서는 안 된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계속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음.
- <한국 국무총리,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접견...‘바른 역사 인식’ 강조>(2/13, 미국의소리)
 - 정홍원 한국 국무총리는 13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를 면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과거를 매듭지어야만 한일 관계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음.
 -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에 대해 한일 관계가 어려운 시기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가 하루 빨리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전날인 12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여성의 존엄을 빼앗은 형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일본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음.
 - 한편, 일본 산케이 신문은 사실을 통해 총리를 지낸 자가 국익을 해치는 언동은 삼가해야 한다며 무라야마 전 총리가 한국 방문에서 반일 선전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 <美 요구하자마자 한일 외교채널 전격 가동>(2/15, 연합뉴스)
 -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요구하자마자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다음주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14일 전해졌음.
 - 이번 회동을 통해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고위급 외교 교류를 전면 보류한 상태로, 이번 회동이 이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음.
 - 이하라 국장은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를 겸임하고 있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음.

라. 미·중 관계

- <“中, 안중근 기념관으로 한·일 관계악화 시도”(INVT)>(2/9, 연합뉴스)
 - 미국 인터내셔널뉴스타임스(INVT)는 8일(현지시간) 중국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면에 미국과 일본에 대처하는 중국의 복잡한 계산이 깔렸다고 분석했음.
 - INVT는 하얼빈역 안 의사 기념관 르포 기사에서 지난달 9일 중국이 개관한 이 시설이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는 한국과 일본 관계를 최소한 상징적으로는 틀어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최대 동북아 동맹국으로, 미국은 한·일 공조를 토대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기 때문에 기념관 건립으로 한·일 갈등을 고조한 중국의 결정이 지정학적 '계산'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신문의 풀이임.

- <중국 "건강한 중미관계, 평화·안정에 유리">(2/13,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국에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 건강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답변을 했음.
 - 화 대변인은 "양측은 중미간 신형대국관계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건강하고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중미 관계가 양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 및 발전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이런 중국 정부의 반응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내심 실망감을 표시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미국, 남중국해 분쟁 시 필리핀 지원할 것”(2/14, 연합뉴스)
 - 필리핀을 방문 중인 그리트 미 해군 참모총장은 국방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필리핀과의 상호 방위조약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런 발언은 남중국해상 거의 모든 분쟁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중국이 유사시 무력으로 도서들을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임.
 - 그리트니 총장은 이어 "국제 규범을 뛰어넘는 공격적 행위는 좋은 질서에 어긋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싶다"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런 방향으로 하는 일부 발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발언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관측통들은 이와 관련해 미국 고위관리들이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공세를 잇달아 비판하는 상황에서 합정과 지휘부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다면 양국의 군사 공조를 대외에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했음.



- <케리 방중...美 '협력압박', 中 '핵심이의 존중'(2/14,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지도부와 회동했음.
 - 양국은 지난해 정상간 합의된 '신형 대국관계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민감한 현안에서는 서로의 간극이 상당히 있음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짐.
 - 미국은 북한의 상황 악화 조치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과 압박을 강조했으나, 중국은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음.
 - 또한 방공식별구역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영토 문제는 자국의 '핵심 이익'이란 점에서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며,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의 반성과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관계개선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15일 국무부가 배포한 발언록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중 양국이 북한 비핵화 촉진과 관련한 서로의 안을 제시했다"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앞으로 수일간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는 미·중 양국이 교착상태에 놓인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외교가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음.

마. 미·일 관계

- <<美日,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공조>>(2/11, 연합뉴스)
 - 최근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현에 있는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을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이마 히로카즈 오키나와현 지사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만나 후텐마 비행장의 운용을 5년 내에 중단하는 문제를 다루는 협의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스가 관방장관은 "서둘러 설치하겠다"고 답했음.
 -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의 사항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아베 내각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10일 살바도레 안제렐라 주일 미국 사령관은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훈련의 절반가량을 오키나와 현 외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고, 캐롤라인 케네디 대사는 11일부터 부임 후 처음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한 바, 이러한 행보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관한 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음.



바. 중·일 관계

● <아베 "중일 충돌 발생해서는 안 돼">(2/9, 연합뉴스)

- 환구망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닛케이 아시아평론' 인터뷰에서 "절대 중일 양국간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충돌이 일어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 아베 총리는 또한 중국 지도자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면서, 양국 관계가 전략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돌발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아베 총리는 또 중일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언제나 중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 환구망은 그러나 아베 총리가 양국 관계의 복원을 바라면서도 여전히 "역사와 국제법에 따라 다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했다"고 비판했음.

● <"센카쿠문제는 2010년 中어선사건 日대응 미숙 계기">(2/11, 연합뉴스)

- 영국의 중·일관계 전문가인 캐롤라인 로즈 리즈대 교수는 '2012년과 2013년의 중·일관계 긴장'이라는 논문에서 센카쿠 영유권을 놓고 지켜오던 중일 간 현상유지 상태에 변화가 생긴 것은 과거 일본 민주당 정부의 미숙한 대처 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중일 정부 모두 2010년까지는 영토 문제에 관한 한 '보류해 두자'는 합의 아래 현상유지 상태를 충실히 지키며 긴장 고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2010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건 당시 중국 선원들의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등 일본 민주당의 이러한 대처는 중국으로부터 험악한 외교적 반응을 불러왔음.
- 그는 결국 이 사건은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를 '선반에서 끄집어내고', 양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재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 <<중일, 軍위안부·센카쿠 놓고 '대만 끌어안기' 경쟁>>(2/13, 연합뉴스)

- 중국이 외교·군사 갈등을 빚는 일본을 의식해 대만과의 첫 양안 장관급 회담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대만 중국시보 등은 양안 회담 중국 측 대표인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 공실 장즈쥘 주임과 대변인 등이 최근 양안이 협력해 일본 우익 세력의 행위에 반격해야 한다며 양안의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 중국은 일본이 2012년 9월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 이후 영토 분쟁 등 현안과 관련해 일본과 대만이 연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견제해 왔음.
- 이런 점에서 중국이 정부 간 대화로 인식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양안



장관급 회담을 수용한 것도 다분히 일본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고 대만 매체는 해석했음.

-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해 4월 센카쿠 근해 어장을 대만 측에 대폭 양보하는 내용으로 대만과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대만의 손을 잡으려고 공을 들이고 있음.

● <<중국 '난징대학살' 세계에 알리기...일본에 '맞붙'>>(2/14, 연합뉴스)

- 일본 내에서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중국 외교부 산하 외신기자센터(IPC)는 14일 베이징 주재 외신기자들에게 "19~20일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기자들은 취재신청을 하기 바란다"는 연락을 해 사실상 '맞붙'을 냈음.
- 이와 함께 중국당국은 최근 난징대학살 사건을 기록한 자료집 원본 183권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 자료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키로 했음.
- 중국정부가 이러한 행보는 보이는 것은 이 사건을 세계무대에서 공론화하려는 것에는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한편, 극우성향의 야쿠타 나오키 NHK 경영위원은 최근 난징대학살은 근본적으로 없었으며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가 과장해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해 중국인들을 분노케 한바 있음.

사. 중·러 관계

● <시진핑, 소치 방문 마치고 귀국...'중·러 밀착' 과시>(2/9,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 관계'를 과시했으며,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국제 현안에서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일본 군국주의의 엄중한 죄행', '제2차 세계대전 70주년 행사 공동개최'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역사 공조'에 나섰다.
- 또한 두 정상은 시리아 화학무기 해체를 위한 해상운송 연합작전을 수행 중인 양국 함정의 함장과 영상통화를 함으로써 시리아 문제 등에서의 전략적 공동 행보도 과시했음.
-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중국 최고지도자가 국제대회 개막식 참석차 외국 방문길에 처음 나선 것이란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음.

아. 기타

● <“러시아, 中日 갈등 이용 아시아 영향력 확대 피해”>(2/9, 연합뉴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소치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음.

- 류장용 칭화대 교수는 "중일 분쟁은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일본과는 협상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도록 허용했다"라고 평가했음.
- 량원상 베이징대 교수도 "두 나라는 러시아가 지역 안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센카쿠 분쟁에서 지지를 얻기를 바라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중국 헤이룽장 사회과학원의 일본문제 전문가인 다즈강은 중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지나친 의존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 <<日, 미·러 상대 외교총력전에도 핵심현안선 '빈손'>>(2/9, 연합뉴스)

- 일본의 기사다 후미오 외무상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아베 신조 총리는 8일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했으나, 핵심 현안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기사다 외무상의 방미 성과를 꼽는다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케리 장관과 뜻을 같이했으나, 케리 장관은 기사다 외무상이 제안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았고, 발언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할애해가며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음.
- 푸틴 대통령은 10~11월께 방일약속을 했으나, 일본이 간절히 희망하는 쿠릴 4개섬 문제에 대해서는 차관급 회담 등에서 협의를 계속하자는 뜻만 확인했을 뿐 진전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았음.

● <<중국군, 해외훈련 참가확대... "외연 넓힌다">>(2/12, 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은 11일부터 태국에서 시작된 한국, 미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8개국 연합훈련인 '코브라골드' 훈련에 처음으로 17명의 병력을 파견했음.
- 1982년부터 32번 치러진 이 훈련에 중국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중국 당국의 강군 육성 의지가 담겼었다고 분석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부쩍 해외 연합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각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처음으로 전투병을 파견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꾀하고 있음.
- 이런 중국의 행보는 주요 2개국(G-2)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자국이 권리를 주장하는 해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임.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IOC, 북 유망주 3명에 '올림픽장학금'(자유아시아방송, 2.10)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북한 선수 3명의 훈련비를 지원했으나, 3명 모두 올림픽 본선 진출을 위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해 지원을 중단
 -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의 '올림픽연대위원회(Olympic solidarity commission)'는 '올림픽 장학금'을 1960년대부터 시행
 -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장학금을 받은 선수는 남자 피겨의 최현 등 제 23회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도전장을 낸 북한 선수 3명
 - IOC가 북한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지원한 장학금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만 달러이며 선수별로는 약 2만 달러
 -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16년 브라질 리오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북한 선수의 출전을 위한 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지원요청을 접수한 뒤 심사할 것이라면서 선수들에 대한 지원기간은 올해 9월부터 리오올림픽이 열릴 2016년 8월까지라고 응답

- "북한, AI 방지대책 마련은 '보여주기' 선전에 불과"(데일리NK, 2.10)
 - 북한 노동신문은 8일 북한이 최근 내각 보건성을 중심으로 돌림감기와 홍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확산 방지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신문은 국경통과지점과 비행장, 항만 주변에서 사업하는 북한 보건부문 간부들이 외국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 그러나 탈북자들은 그동안 북한 측 세관에서 AI에 대한 특별한 검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북중 국경지역에서 밀수가 이뤄지는 상황에 AI 병원균 유입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 또한 당국이 그동안 질병 발생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AI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북한 당국의 선전과 달리 방역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



- 한 고위 탈북자는 10일 2005년 평양시 소재 해당 닭공장(양계장) 등 2, 3곳에서 AI가 발생했으나, 주민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그 아까운 것을 왜 묻냐'고 안타깝게만 생각했다고 언급
- 북한에서 보건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탈북자 김영미(여·가명) 씨는 "북한에서는 AI가 발생해도 남한처럼 요란을 떨거나 방역에 비상이 걸리지는 않는다"면서 "하루에 창문을 여러번 열고 환기를 시키고 집짐승 우리 청소를 잘 해야 한다는 식의 지시를 하며 민간요법으로 대부분 해결한다"고 설명

● 北 "일제 강제연행 범죄 반드시 계산될 것"(연합뉴스, 2.11)

- 북한은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의 강제연행 범죄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고 경고
- 신문은 "과거 일본정부와 군부가 공모해 조직적으로 감행한 성노예 범죄는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최대의 인권 범죄"라며 일본은 이에 대해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하며 두고두고 죄값을 치러야 할 법적·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춰보려고 비열하게 돌아댄다"고 비난
- 또한 "일본 반동들의 과거범죄 부정행위와 역사왜곡책동은 재침의 전주곡"이라며 일본의 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의 강제연행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계속 군국화, 우경화의 길로 나간다면 "일본은 영원히 국제사회의 적국으로 배격당할 것"이라고 주장

● 케네스 배 가족 "잭슨 목사 방북 의사 감사"(미국의 소리, 2.11)

- 케네스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이 또다시 전격 취소된 데 안타까움을 표명했으며, 배 씨가 지난 달 20일 병원에서 특별교화소로 이송돼 괴롭다고 호소
- 그러면서 이는 배 씨의 귀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거듭 상기시키는 상황이라고 강조
- 그러면서도 배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고무돼 있음을 나타냈으며,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가 배 씨 석방을 위한 인도주의적 임무에 동의한 데 대해 방북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석방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

● 脫北者 96% "북한에 살 때 빈부격차 느꼈다"(조선일보, 2.11)

-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2~24일 최근 탈북자 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8.5%가 '북 개혁·개방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으며, 남북 경제교류(12.5%)



- 까지 합치면 경제 개방에 대한 요구는 61%에 달함.
- '북한 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주민의 90% 이상'이란 답이 21.0%, '80~90% 미만'이 27.5%로, 주민의 80% 이상이 시장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워 북한 주민의 생활이 사실상 시장경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형편
- 북한은 배급체제 붕괴와 사(私)경제 부문의 확대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 못지않은 극심한 빈부 격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78.0%가 '북한에 살 때 빈부 격차가 컸다'고 했다. '격차가 조금 있었다'(18.0%)는 응답까지 합치면 무려 96%가 빈부 격차를 체감
- '북한에서 가장 잘살고 힘있는 계층은 노동당 간부'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고, '무역과 외화벌이 간부'가 40.0%
-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경제가 활성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은 오히려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 생활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51.5%, '나빠졌다'는 응답은 20.5%

● 북한 주민, 中서 교회 간 것 적발돼도 당당하...(데일리NK, 2.11)

-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에서의 단순 기독교 활동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소식에 밝은 중국 단둥(丹東) 소식통은 11일 "최근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을 비롯해 중국 방문자들이 교회에 접근해 관련 행사 등에 참석한 것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전에 교회에 갔거나 성경만 봐도 무조건 교화소나 경중에 따라 정치범 수용소를 보냈지만 이제는 단순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찾아 간 것에 대해서는 심하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언급
- 소식통은 실질적 종교활동을 벌인 경우에는 아직도 강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중 80% 이상이 교회에 가거나 종교인들을 만나 방조(傍助)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상당해 단순 가담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조사만 받고 풀려난다고 강조
- 그러나 "김정은 등 김 부자에 대한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북한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진다"면서 "특히 중국에서 이러한 비판적인 언행을 하고 종교활동에 가담하는 북한 주민들은 보위부의 체포조에 의해 납치돼 강제 북송된다"고 지적

● WHO·FAO '북한 조류독감 발생 보고 없어'(미국의 소리, 2.11)

- 유엔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류독감 발병 보고는 없었다고 밝힘.



- 세계보건기구(WHO)의 그레고리 하틀 대변인은 10일 현재 북한 정부로부터 조류독감 발병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언급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키산 군살 박사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조류독감 발생 보고나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
-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최근 조류독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조류독감에 대해 보도
-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조류독감의 위험성과 예방 대책 등을 잇달아 보도했으며, 조선중앙TV도 지난 5일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개

● 북, 당원자격도 뇌물로 거래(자유아시아방송, 2.11)

- 제대를 앞둔 북한군 병사들이 노동당 당원이 되기 위해 고향의 부모들에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등 북한 내에서 당원자격도 뇌물로 거래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안북도 주민 소식통은 군에 간 자식이 제대를 앞두고 당원이 되기위한 사업(로비)을 위해 고향의 부모들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
- 입당에 필요한 뇌물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300달러 이상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이며, 북한 서민들에게는 큰돈이어서 차라리 당원 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은 형편
- 제대를 앞둔 병사들이 뇌물을 고이면서까지 당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10년간의 장기복무에 대한 보상심리와 함께 제대군인들에게 당원이 될 수 있는 문호가 가장 넓기 때문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당원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대를 앞둔 병사들은 입당을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는 설명
- 요즘 북한 사회에서 당원은 흔한 존재라고는 하지만 당원이 되지 않고서는 관료로서 출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원이 되기 위한 주민들의 열망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는 당과 지도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음.

● 미국 "북한, 킹 특사 초청 사흘 만에 취소"(연합뉴스, 2.12)

- 쟈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 초청을 사흘 만에 번복했다고 밝히며 "북한은 관계도 없는 사안인 군사훈련을 케네스 배의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판
- 사키 대변인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케네스 배의 석방 문제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연례 군사훈련은 투명하고, 정례적이고,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
-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과 평양을 방문한 데 대해 "이는 개인적인 방문으로,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간 게 아니다"라는 기준



입장을 거듭 확인

● 중국, 북 접경지에 감시카메라 설치 효과 '톡톡'(KBS, 2.12)

- 중국 공안부의 인터넷 매체인 중국경찰망은 지난해 초 북·중 국경 일대에 500여 대의 고해상도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뒤 40여 건의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해 치안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도
- 중국 당국은 이들 지역에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북한인들이 밤에 강을 건너 식량과 가축을 약탈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치안을 강화해왔으며, 탈북자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숨겨줄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도 운용
- 중국 내 소식통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을 막기 위한 국경 지역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북한의 식량 사정이 부분적으로 나아지면서 북·중 국경을 통한 탈북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 매체통해 폭설 언급, '알아서 해결하라는 뜻'(데일리NK, 2.12)

- 북한에서 7일부터 이어진 폭설로 현재 금강산 지역에 2m가 넘는 눈이 쌓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특별한 장비 없이 삽 등으로 제설작업에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2시 사이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졌다"면서 "강원도 고성군의 적설량이 155cm를 기록했다"고 보도
- 탈북자들은 북한이 제설장비 및 자재가 없어 이런 폭설 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주민들을 동원한다고 증언
- 또한 북한의 방송매체들은 폭설이 내린다고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뿐 당국 차원에서 제설작업에 대한 지원이나 폭설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언급하지 않으며,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해라'는 식의 방송은 주민들에게 '알아서 해결해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
- 강원도 출신 한 탈북자는 북한 언론들이 폭우 피해상황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과 달리 눈 소식은 거의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에서 폭우는 농사 피해나 집이 떠내려가는 등의 문제로 직결되지만 폭설은 그다지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

● 북, 연예인들 숙청 바람(자유아시아방송, 2.12)

- 장성택의 측근으로 분류된 북한 연예인 40여 명이 청진시 '수성교화(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감자들 중엔 '모란봉악단' 공훈배우 류진아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민배우 리익승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이 10일 "함경북도의 외화벌이 간부로부



터 직접 들었다"며 연예인 숙청설에 신빙성을 더함.

- 북한 내부의 다른 소식통 역시 청진시 '수성교회소'에 많은 예술인들이 수감됐다는 소식은 이미 함경북도 주민들속에 잘 알려져 있다고 설명
- 예술인들이 수감된 청진시 '수성교회소'는 '1급 정치범'들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지금의 인민군총정치국장 최룡해가 연루되었던 과거 '청년동맹사건' 당시에도 '중앙청년예술선전대' 여배우들이 수감되었던 곳

● "북, 강제입양도 흔하고 양부모 말 거역하면 수용소행"(데일리안, 2.13)

- 북한인권 범시민사회단체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무엇이 올바른 북한인권법인가?'라는 주제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 개최
- 토론회에는 과거 북한 정치수용소 수감자들을 비롯한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진 가운데 한 증언자가 북한 내에서 본인 동의 없이 자녀를 입양하는 현실과 또 입양한 자녀에 대해 자행되는 반인륜적인 행위 발표
- 북한군인 출신 김정아씨는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며,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통해 발생한 수많은 고아들을 입양한 사람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 입양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모 없는 고아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만연
- 하태경 의원은 "북한인권법 취지 중 하나가 북한인권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은 물론 해당 법안에 북한인권 NGO단체들의 지원책을 꼭 넣어야 한다"고 당부
-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보편성만 갖고 따지기에는 북한의 군사적 상황 등 특수성과 충돌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북한인권법 관련 민주당의 대안책을 언급하며 여당과의 절충을 강조

● "김정은, '탈북자 반항하면 총살' 국경에 명령 하달"(데일리NK, 2.13)

- 북한 당국이 최근 국경연선(沿線)에서 '탈북하다 체포된 주민에 대해 총살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을 국경경비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주민에 대한 총살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라 국경지역 주민들이 긴장
- 북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금 국경은 완전 봉쇄된 상태이며, 두만강에서 먹는 물을 길거나 빨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모두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
- 최근 검열로 탈북하거나 밀수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명령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 말려 죽이려는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형편

- 이어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2월 16일(김정일 생일)이 지나면 탈북자 가족들을 모두 추방시킨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보안원들은 탈북자 가족들에게 '생활 잘하라'며 위협적인 말까지 하고 다닌다"고 전함.

● 북, 군인 탈북방조 막으려 압호제 실시(자유아시아방송, 2.14)

- 북한이 탈북 도강을 방조하는 국경경비대 사관들을 단속하기 위해 통행압호 제도까지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2월 16일을 맞아 북한 전역에는 특별경비주간이 실시될 것으로 보임.
- 북중 국경상황에 밝은 한 소식통은 지난 1월 함경북도 회령지구 대대 초소에서 여단 순찰대 사이에 총격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도강하는 자들을 보면 즉시 발포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초소 군인들이 먼저 총을 쏘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고 언급
- 제대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도강을 방조하는 경비대 사관들을 적발하기 위해 여단에서 각 대대와 초소에 순찰대를 수시로 파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청진시 주둔 27여단에서 파견된 순찰대가 국경경비대 초소에 접근하던 중 초소에서는 탈북자로 오인하고 총기 발사
- 이에 따라 국경당국은 순찰대와 국경초소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날 지정된 통행압호를 전달하고, 하루에 저녁과 심야에 두 번 정도 통행압호를 변경하게 하고 있음.
- 이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정된 통행압호를 모르는 사람이 국경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되면서 탈북이 곱절 어렵게 됨.

● 북, 비료확보 못해 올 농사 불투명(자유아시아방송, 2.14)

- 북한이 협동농장의 말단조직 책임자인 농업 분조장 대회까지 열어가며 금년 농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농사가 가장 중요한 비료를 확보하지 못해 올해 농사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
- 중국 내 대북소식통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그간 농사용 화학비료를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해온 것을 감안하면 2월 중순부터 금년 농사용 비료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비료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상황
- 중국 당국은 통상 3월부터 내수용 비료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용 비료에 관세를 100%나 부과하기 때문에 3월 이후 비료 수입가격이 두 배로 될 수 있으나,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 당국이 아직까지 비료를 대량으로 수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화 사정이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 북한사정에 밝은 중국 단둥의 무역회사 소식통은 북한이 장성택 처



형의 여파로 금년에는 중국 측에서 외상거래를 사절하고 있다고 지적

-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과 거래를 하던 중국 무역회사들이 이미 외상으로 보낸 물건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 거래를 계속해야 할지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년처럼 외상으로 비료를 보내려 하지 않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함.

● **방북 그레그 前대사 귀환... "케네스 배 석방촉구" (연합뉴스, 2.14)**

- 최근 방북했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14일 베이징으로 귀환, 방북기간 북한 당국에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힘.
- 방북 일정을 마치고 이날 베이징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 그레그 전 대사는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미국 측 인사의 방북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언급
- 그레그 전 대사는 "그것(케네스 배 씨 석방문제)이 우리가 북한에 간 이유는 아니며 우리 의제도 아니었다"면서도 "그가 풀려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 측에) 유감과 함께 조속히 석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

● **"지난해 북한 주민 식량 소비상태 개선됐지만..." (데일리NK, 2.14)**

- 세계식량계획(WFP)이 14일 웹 사이트에 발표한 대북 지원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북한 주민 식량 소비 면에서 '취약'(poor)에 해당하는 가구는 17%였으며 '경계'(borderline)에 속하는 가구는 38%
- 지난해 북한에서 식량 배급량 증가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주민들의 식량 소비 상태가 다소 개선됐지만 북한 가구의 55%는 여전히 식량 부족 상태
-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소비 상태가 나아진 것은 식량 배급량 증가와 WFP의 지원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분석
- 또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배급량이 지난해 10월 390g으로 늘어난 데 이어 11~12월에는 400g으로 증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1분기 식량 소비 상태 '취약'에 해당하는 가구가 42%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식량난이 덜할 것이라고 전망
- 북한 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식량 부족으로 끼니를 거르는 가정은 없지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며, 올해도 북한의 콩 생산량이 줄어 주민들의 콩 소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WFP는 식량 자원 활동을 진행 중인 북한 지역 119가구 방문과 당국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도출



● **北인프라 조성 돕는 '통일촉진법' 만든다(조선일보, 2.14)**

- 새누리당 내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은 13일 통일에 대비해 북한에 인프라·금융 기반을 조성해 주고 산업·농림 분야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일 기반 조성 및 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
- 여권에서 통일 관련 기본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국회 차원에서 통일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통일의원 모임이 최근 작성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초안은 여·야·정(與野政) 통일 협의체를 법적 기구로 만들고, 협의체의 활동 방향과 지원 조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규정을 뒀으며,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대북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양성 기구도 두도록 결정
- 북한의 경제·산업·농림어업 분야 전문가들을 남한으로 초청해 교육시키고 일정 기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통일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역할과 업무 분담, 체계적인 통일 운동과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
- 통일의원 모임은 여야 간 통일 문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통일추진특별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

● **"북한, B-52 출격에 열받아 케네스 배 재수감"(연합뉴스, 2.15)**

- 북한이 미 공군 B-52 폭격기의 최근 한반도 출격에 화가나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를 다시 노동교화소에 재수감
- 미국 뉴스 전문 방송 ABC 뉴스는 최근 방북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리영호 북한 외무성 제1 부부장 등 북한 관리들의 말을 빌려 배 씨가 노동교화소에 재수감된 이유를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격에 화가 치민 북한 당국의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14일 보도

● **北, 김정은 시대 '첫 선거' 준비에 총력(연합뉴스, 2.16)**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4일 북한에서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화됐다고 "선거구, 선거분구 위원회들은 선거사업과 관련한 일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
- 조선신보는 "2월 초 현재 전국 각지에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선거분구들이 일제히 조직돼 자기 활동을 개시했다"며 현재 평양시 내의 모든 선거구와 선거분구에 선거위원회 간판이 나붙었다고 보도
-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선거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실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추대된 것도 이번이 처음
- 북한 당국은 이번 선거를 위해 여느 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강조



-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방송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각 지역 담당 보위원들이 무역업자나 친척 방문 등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와 북한 주민들에게 3월 5일 이전에 맞춰 무조건 복귀하라는 지시도 이미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 북한인권

● '통일대박론' · 北인권 신경전(연합뉴스, 2.10)

- 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통일대박론'과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임.
-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야당에서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함.
- 북한 인권과 관련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함.
- 그는 최근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합의도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내외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선택한 '위장 평화 공세'로 해석함.
-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며, "보수도 북한의 자유권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진보도 북한의 생존권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의 인도적지원법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조명철 "3월 대량 탈북 예상...5천명 수용소 수감"(연합뉴스, 2.11)

-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 "40대 이상 주민들을 중심으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밝힘.
- 또한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에 대한 공포 정치가 심해지고 있고 5천명 정도가 교도소 및 정치범 수용소에 추가로 수감됐다고 전함.
- 간부들의 출장이나 여행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됐으며, 특히 장성택 측근의 외화벌이 부대 소속 군인들도 생활제대(불명예 전역)당하고 감시 대상에 새로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생활제대 당한 군인들은 함경도 탄광 및 광산 지역으로 강제이주되었으며, 함경도 일대 감시 및 통제가 휴전선 부근보다 강화되었다고 언급함.
- 특히 조 의원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단속 및 통제가 심하지만 오는 3월부터 대량 탈북이 예상된다"고 설명



- 그는 북한이 국제적 고립으로 외화벌이를 위한 근로자 추가 파견을 계획하고 있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인건비가 1인당 월 1천300위안으로 높은 편이어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함.
- "2월 현재 중국에 파견 나간 북한 근로자는 10만 3천 명으로 5만 명 정도를 추가 파견하고자 (중국과) 협상 중"이며 북한 근로자들은 보안성 정치학교 졸업학생들로 5인 1조로 상호 감시 중에 있음.
- 조 의원은 북한 여성의 생활상과 관련해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 브로커의 협력으로 적발이 어렵다고 주장함.

● 유럽연합 '북한인권 유린에 국제적 관심 집중돼야(미국의 소리, 2.11)

-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유럽연합이 유엔 인권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다뤄야 한다고 밝힘.
-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조사위원회가 발표하는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

● 북 회령 수용소 참상 공개... "쥐·구더기도 먹어"(YTN, 2.11)

- 탈북했다 북한 보위부에 붙잡힌 뒤 2010년 전거리 교화소에 수용된 한 여성의 증언을 통해 전거리 교화소의 참상이 공개됨.
- 전거리 교화소는 수용자 80%가 탈북자로 함경남도 요덕 수용소보다 생활이 더욱 참혹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여성은 교화소 내에서 먹을 것이 없어 쥐나 구더기를 잡아 먹는 것은 예사이고 한 해 200~300명이 죽어나갔다고 증언함.
- 쌓여진 시체는 가마니에 쌓아 소각장에 버려지는데, 여기서 생기는 구더기가 수용자들에게는 식량이 됐다고 설명함.
- 이 탈북자는 2012년 김일성 주석 100살 생일을 맞아 수용자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무위로 돌아갔고, 김정은 제 1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시작됐다고 증언함.
- 기적 같이 사면을 받아 2년 반 만에 전거리 교화소에서 해방된 이 여성은 최근 재탈북에 성공해 제 3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유엔 북한인권 정례검토, 5월 1일(미국의 소리, 2.11)

-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오는 5월1일 실시한다고 밝힘.
- 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제네바 유엔본



부에서 열리는 제 19차 '보편적 정례검토' 대상국에 포함돼, 5월1일에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을 예정

- 이 자리에서 각 회원국들은 북한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이 이미 갖고 있는 기록,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자료를 심사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정부에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할 수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결과문'을 오는 5월 6일에 채택할 예정

● 유엔 COI 최종 보고서 17일 발표(자유아시아방송, 2.11)

- 유엔 차원의 최초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오는 17일 지난 1년 간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오는 17일 오후 2시(현지시각)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 세 명의 조사위원 중에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두 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보고서의 내용과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소개할 예정
- 제네바에 기반을 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롤란도 고메즈(Rolando Gomez) 공보담당은 11일 북한인권사의 한 획을 그을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

● 국경없는 기자회견 '북한 언론자유 김정은 정권서 악화'(미국의 소리, 2.12)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견'은 11일 발표한 '2014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18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북한을 에리트리아에 이어 두 번째 최악의 언론탄압 국가로 지목
- 그러면서, 북한은 정보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
- 국경없는 기자회견의 벤자민 이스마일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11일 김정은 정권 들어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언급
- 이스마일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이 국경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면서 외부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관영매체를 통한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북한의 언론자유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일부에서는 북한 내 휴대전화 등의 사례를 들어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건 전혀 아니라고 지적



- 또한 북한 당국이 AP통신' 평양지국 개설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AP통신'의 운영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북한 당국이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

● **미 하원 청문회 증언 "북한서 정전 이후 기독교인 30만 숨져"(미국의 소리, 2.12)**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세계보건인권소위원회는 11일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세계적인 박해'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
- 증인으로 출석한 '보스턴 글로브' 신문의 존 앨런 부편집장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며, 기독교인의 약 25%가 노동수용소에 보내졌다고 발언
- 앨런 부편집장은 북한의 기독교인 수가 20만~4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북한에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해 심지어 조부모가 기독교인이었을 경우에도 당이나 군 등 요직에 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서 30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라졌으며, 이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숨지거나 처형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제기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위원도 서면증언서를 통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탄압 실태를 지적했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밀 종교 활동이나 종교와 관련된 물건을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설명
- 이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까지 포함시켜야 하며, 미국이 중국의 강제복송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데려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국제NGO, 북한 소년병 징집중단 촉구(자유아시아방송, 2.12)**

- '세계 소년병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the Use of Child Soldiers)'을 맞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비정부단체들은 무력 갈등에 소년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
- 소년병반대국제연합(Child Soldiers International)의 차루 라타 호그(Charu Lata Hogg) 아시아 담당국장은 북한도 소년들을 징집하는 나라에 포함된다면서 군대징집의 최소연령을 18세로 높이기 위한 아동권리협약의 새로운 조례(Optional Protocol)에 서명하고 관련 국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
- 소년병반대국제연합의 호그 국장은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소년병을



징집하는 이유를 병력 충원이 쉽고, 조종이 쉬우며, 성인에게 주는 것보다 돈이나 음식을 덜 줘도 되어 병력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경제적 이점 등으로 분석

●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법 위한 길거리 캠페인 진행(크리스천투데이, 2.13)**

-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은 12~14일 3일간 서울 광화문과 시청, 신촌 등지에서 '북한인권법을 위한 아름다운 걸음'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
- 이번 캠페인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난 10년간 통과되지 못한 북한인권법이 하루빨리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화되길 희망하는 강한 바람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반인과 대학생, 탈북청소년, 외국인, 올인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
- 이번 캠페인은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논의하고 계획하여 시민연합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캠페인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침묵과 행진을 통해 전달하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 국제법정 제소 결론"(연합뉴스, 2.15)**

- 14일(현지시간) AP통신이 확보한 COI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를 회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AP통신은 COI의 최종보고서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자로서 이런 내용의 결론 요지를 입수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도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확인
- COI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지원할 조직(structure)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
-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굶주린 주민에 대한 '절멸'(extermination)과 광범위한 한국·일본인 납치 등 다수의 범죄 증거를 확보했으며,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으로 살해,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강제적 이동, 강제실종, 그리고 정치·종교·민족·성별에 기반을 둔 박해 등을 언급
- 다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지는 않음.

-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뉴욕 소재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대변인은 "우리는 반인륜 범죄에 관한 COI의 근거 없는 결론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지적

3. 탈북자

● 캐 탈북난민심사 '간간' 작년 수용률 고작 8%(자유아시아방송, 2.10)

-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이 최근 새로 집계한 난민입국자 통계(Claims Referred and Finalized: North Korea)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정부는 21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
-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멜리사 앤더슨(Melissa Anderson) 선임공보담당은 지난해 257건을 심사해 이 중 21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설명
- 지난해 캐나다 정부의 난민 수용률이 10명 중 한 명도 안 되는 8%에 그친 것으로, 앤더슨 선임공보담당은 각각의 경우에 의해 증거자료와 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응답
- 2012년에 캐나다 정부는 290건을 심사해 230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수용률이 약 80%, 2011년에는 170명을 심사해 117명을 받아들여 수용률이 약 70%, 2010년에도 58명을 심사해 42명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 수용률이 70%를 웃돌았던 것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이며, 새로 수정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도 115건 중 64명에게 난민지위를 수여한 것으로 집계돼 난민 수용률은 56%
- 캐나다 토론토의 대북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잭 김 대표는 지난해 봄 캐나다와 한국 정부 간에 지문 공유를 시작한 것이 탈북자 수용률이 급감한 이유일 것이라고 보았으며, 2012년 12월 15일부터 새로운 난민수용 규정이 도입되면서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자 수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지적

● 국내정착 탈북 근로자 평균 월급 141만원(연합뉴스, 2.11)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난해 8~9월 20세 이상 성인 탈북자 2천355명을 상대로 실시한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공개
- 조사 결과 탈북자 실업률은 9.7%로 국내 전체 실업률 2.7%(지난해 9월 기준)의 3배가 넘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56.9%로 국내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62.1%에 미치지 못해 경제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국내 취업자 중 일용직 비율은 6.3%인 반면 탈북 근로자의 일용직 비율은 20.7%나 돼 고용의 질도 상대적으로 열악



- 다만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탈북자 근로자의 일용직 비율은 2011년 32.2%, 2012년 22.6%, 2013년 20.7%로 감소하는 추세
- 탈북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41만4천원으로 조사됐으며, 월 소득이 '101만~15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았고 '151~200만원', '201만~300만원', '3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23.6%, 7.3%, 0.7%
- 탈북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 시간은 47.9시간으로 한국 전체 평균보다 7.9시간이나 많았음.
- 남한 내 생활수준 항목에서는 자신을 '하류층' 또는 '중하류층'이라고 답한 비율이 37.6%, 21.5%로 높았다. 자신을 '중류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21.5%로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 탈북자들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조사됐는데, 응답자 54.2%와 20.3%가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
- 탈북자들은 남한 생활 만족 이유로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43.5%, 이하 복수응답),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42%),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아서'(31%) 등을 제시
- 반면, 남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경제적 어려움'(70.2%), '탈북자에 대한 각종 차별'(33.6%)를 이유로 든 이들이 많았음.
-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은 $\pm 2.1\%$ 포인트 이내

● 필로폰 노트북에 숨겨 밀수입한 탈북자 '징역 3년'(연합뉴스, 2.14)

- 울산지법은 14일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에 숨긴 필로폰을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10만원을 선고
- A씨는 캐나다에 사는 B씨와 공모한 후 지난해 10월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 속에 필로폰 10g을 숨긴 국제택배를 받는 방법으로 2차례 밀수입해 기소됐으며,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음.
- 재판부는 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으로 죄질이 나쁘나, "수입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2010년 탈북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부족'(미국의 소리, 2.15)

-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난민연구센터가 최근 '강제 이주 검토' 보고서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대한 문제는 탈북자 문제를 다룰 국제적인 틀이 없다는 점이라고 제기
- 전 세계 강제 이주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탈북자들이 일단 중국에 들어가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으



- 며 합법적인 거주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고 지적
-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부족하다면서 국제사회가 응집력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
 -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자국 내에서 발견된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고, 국제사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탈북자 위기를 관리할 준비를 갖추 것을 촉구
 - 이어 보고서는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같은 역내 국가들의 가장 큰 과제로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를 제시했으며,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보다 탈북자들에 대해 모른 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4. 이산가족

- 류길재 "北, '이산상봉 첫단추' 대통령언급 유의해야"(연합뉴스, 2.10)
 - 류길재 통일부장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관련,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첫단추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
 - 북한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열악하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동포들이 수십 년간 겪는 처절한 인권에 대해 공분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데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게 도리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은 국회차원에서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
- 정총리 "北중대제안, 진정성있으면 남북관계 발전"(연합뉴스, 2.10)
 -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원만하게 성공하고 나면 더욱 진전된 관계로 나아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난달 상호비방·적대행위 중단 등 이른바 '중대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진정성이 드러나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밝힘.
 -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 간 진전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응답



- **반기문, 北김영남 만나 "이산상봉 예정대로 진행"(데일리NK, 2.11)**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 소치를 방문해 북한의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 마틴 내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이날 반 총장이 김영남에게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남북이 합의한 대로 치러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
 - 내시르키 대변인은 또 "반 총장과 김 위원장은 30분 넘게 대화했으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정치와 상관없는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임.

- **北 "훈련기간 상봉 못 해"...이산상봉 파행 가능성(연합뉴스, 2.13)**
 - 북한이 12일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진행에는 동의했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은 어제 접촉에서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되 군사훈련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
 -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오는 20~25일,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 시작될 예정이어서 24~25일 이틀이 겹치며, 북한이 군사훈련 기간 상봉 행사를 거부할 경우 이번 상봉의 2차 행사가 무산되거나 파행될 가능성이 농후
 - 북측은 전날 접촉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이산가족 상봉 뒤로 연기하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인도주의 사안과 군사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일축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원활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준비를 위해 금주 내 선발대를 금강산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방부도 북한의 키 리졸브 연습 연기 요구를 일축했는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방어적 성격의 군사연습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

- **남북 "이산상봉 예정대로 진행" 등 3개항 합의(연합뉴스, 2.14)**
 - 남북은 14일 판문점에서 재개된 고위급 접촉에서 기존 합의대로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키로 하는 등 3개항에 합의
 -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고위급 접촉 결과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상대방에 대



- 한 비방증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계속 협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 노력에 의견을 모았고 발표
-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규정한 이산가족 상봉이 확정되고 남북이 추가 고위접촉과 상호 관심사 계속 논의에 합의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김규현 1차장은 "현안에 대해 남북 상호간의 입장차를 확인하기도 했으나 장시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 없는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
 - 당초 북한은 지난 12일 고위급 접촉에서 키 리졸브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날 우리 측의 계속된 설득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남.
 - 김규현 1차장은 "신뢰의 첫 단추가 이산가족 상봉이기 때문에 우선 믿고 행사를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설득을 많이 했다"며 "북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고 소개
 - 합의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어있지 않으며, 고위급 접촉 정례화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나 다음번에 상호 편리한 날 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정도만 합의했다고 언급

● 여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합의' 환영(연합뉴스, 2.14)

- 여야는 14일 남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3개항의 합의를 통해 오는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을 한 목소리로 환영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상봉규모 확대 등 이산가족 관련 협상에서도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
-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에 환영을 표명하며 "이번 남북 합의대로 대화를 통해 남과 북이 신뢰를 쌓아가는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사일러 "이산가족 상봉 계기 北 태도변화 희망"(연합뉴스, 2.16)

- 시드니 사일러 미국 백악관 한반도담당 보좌관은 1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한미문제연구소(ICAS)에서 열린 한반도문제 세미나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보내는 긍정적 신호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뜻하는 것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북한이 적대적인 말과 행동을 바꾸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향해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

● **이산상봉 남측 선발대 15명 방북(연합뉴스, 2.15)**

-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 남측 선발대 15명은 이날 정오 대형버스 1대와 트럭 1대, 승합차 2대 등 차량 4대에 나눠 타고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CIQ)를 거쳐 방북
- 이들은 금강산 현지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고 상봉 행사 세부 일정을 조율할 계획
- 이번에 방북한 대한적십자사 박 극 과장은 "현지에서 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봉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설명

5. 남북자

● **"北자손 몫 유산은... 시효 지나도 줘야"(동아일보, 2.11)**

- 6·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이 소멸된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호 판사는 6·25전쟁 때 의용군으로 북에 끌려간 뒤 1977년 남한에서 실종 처리된 이 모 씨의 딸(45·탈북자)이 "(아버지가 받았어야 할)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분을 돌려 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 청구소송에서 "충남 연기군의 선산 지분(5만8000여 m²의 315분의 45)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
- 현행법에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본 첫 판결로, 민법에는 상속권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2년 제정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씨처럼 남한 가족의 재산을 두고 북한 주민과 자손들의 상속재산 회복 청구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

● **일 총리 "북한 내부 변화 따라, 납치 문제 해결 기회 잡아야"(미국의 소리, 2.13)**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일본인 납북 문제에 관한 최근 동향과 북한정세 등을 논의

-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내부 변화가 조금이라도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에 연결될 수 있다면 결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며,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오는 17일로 예정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가 일본인 납북 문제 조기 해결에 큰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
-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
- 아베 총리는 납치피해자지원법에 근거한 지원금 지급 기한이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만큼,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
- 이 법은 납치 피해자 가족의 자립과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최장 5년간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납치문제대책본부 산하에 각 부처 국장급으로 '관계 부처 납치 문제 연락회'를 신설해 납치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를 결정

● 69년 KAL기 납북자 가족, 통일부에 방북 신청(연합뉴스, 2.14)

-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이하 가족회)의 황인철 대표는 14일 북한 적십자사를 찾아 부친의 생사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
- 황 대표는 KAL기 납치피해자 일부가 귀환한 날인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
-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의 초청장 없는 일방적 방북을 정부가 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
-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KAL기 납치피해자 생사 확인 및 송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성이 문제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북한에 정당한 요구를 못하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가장 실망스럽다"고 지적

● "日정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관할에 북한 포함 요구"(연합뉴스, 2.16)

-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있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 동남아시아 사무소가 북한을 관할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6



일 보도

- 신문은 일본 정부가 OHCHR 동남아시아 사무소의 체제를 강화해 담당구역에 북한을 포함하는 결의를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도록 관계국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
-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한 최종보고서를 17일 발표할 예정인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이런 요청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언급
- 또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 OHCHR 동남아시아 사무소의 인력을 늘리고 이곳을 북한 문제를 다루는 상설 거점화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

6. 국군포로

● 류길재 "국군포로, 실질적 문제 해결 방향으로 접근"(뉴시스, 2.10)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국방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군포로·납북자 송환문제와 관련,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발언
- 이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류 장관을 향해 "수차례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국군포로·납북자 송환문제를 남북대화에서 아젠다로 올리라는데 왜 올리지 않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문
- 조 의원은 또 "납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왜 금강산에서만 하느냐. 80세 넘은 고령인 가족들은 금강산에 가는 것도 힘들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평양이나 서울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류 장관은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등 근본적인 해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장소)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

7. 대북지원

● 민간단체, 대북 의약품 지원 재개(자유아시아방송, 2.11)

- 남한의 제약 회사들이 1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지원하는 의약품은 평안남도 소재 19개 병원에 전달될 예정
- 최근 10여 개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시가로 약 100만 달러어치의 대북 의약품을 기증했으며, 이 중 30만 달러어치를 지원하는 제약회사 휴온스는 지난 10일 제천 공장에서 마취제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적재를 마칩.
- 휴온스의 대북 의약품 지원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 정부의 승인을 받고 물품 상자를 배에 싣는 일만 남은 상황
- 휴온스 전재갑 대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급변하는 남북 정세를 감안할 때 북한 의약품 지원 사업에 고민이 많았다"면서 "의약품의 절대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는 북한의 실태를 감안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을 결정했다"고 기증 배경을 설명
- 의약품 전달은 대북지원 단체인 '인간의 대지'가 맡았으며, 평성시 인민병원과 덕천시 인민병원 등 평안남도 소재 19개 병원에 의약품을 지원한다고 밝힘.
- 의약품은 통일부의 반출 승인이 나는 대로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보낼 예정

● "스위스 지원 분유 400t, 이달 말 북한 도착"(미국의 소리, 2.12)

- 스위스 정부가 지난해 10월 지원한 총 4백t 규모, 230만 달러어치 상당의 분유가 2월 말 북한에 도착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
- 세계식량계획(WFP)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10일 이 분유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품가공 공장에서 만드는 영양식품의 원료로 쓰인다고 설명
- 이들 분유는 영양과자 공장 두 곳과 슈퍼 시리얼' 공장에 보내질 예정이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은 예정대로 이달 말 문을 닫게 될 것
- 또한 영양과자 생산은 분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5가지에서 7가지 식품재료가 필요
-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에도 북한에 미화 400만 달러 상당의 분유 650t을 지원했으며, 이들 분유는 오는 5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북한에 약 630만 달러 규모의 분유 제공

8. 북한동향

- 인터넷 방송(1.18) '민중의 소리'('민노총'과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 등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 보도를 인용하여 '새해에도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더욱 고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2.9, 평양방송/고조되는 남조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北)의 동포애적 선의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南 당국도 곡해와 대결관념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2.10,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북남관계 개선은 시대의 막을 수 없는 흐름)



- 南 당국은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호소에 적극 화답할 때 남북관계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임.
- 일본의 '강제연행과 성노예범죄 등 과거범죄 부정행위와 역사왜곡 책동은 재침의 전주곡'이라며 이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라고 강조(2.11, 중앙통신·노동신문/일제의 강제연행 범죄는 반드시 계산될 것이다)
- '최근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관과 도덕적 저열성이 강하게 문제시 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청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며 "과거청산의 용단"을 촉구(2.12, 중앙통신·민주조선)
- 일본에서 "과거침략 역사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야스쿠니 신사' 참배·자위대무력 증강과 해외팽창 등)이 커가고 있다"며 이는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종(2.13,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죄악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